"농가부채 전국서 가장 많아… 해결책 시급"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제주자치도 국정감사

제주 7000만원 넘어… 의원들 도의 적극적 역할 주문
개점휴업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혈세 낭비' 지적도
숙원사업 농산물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소극행정' 비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의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이와함께 제주 1차산업의 숙원사업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문제가 기획재정부의 기계적 평등논리와 제주도정의 소극행정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5일 제주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제주현안의 문제점과 과제를 짚어본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농가부채=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 을)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제주도의 농가부채는 전년대비 14.3% 증가한 7459만원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농가부채가 7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농가부채는 전국 평균 농가부채 3327만원보다 무려 4132만원이 많고, 농가부채가 가장 적은 충북(1789만원)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 의원은 또 40세 미만 청년농가·어가 가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제주도 전체 예산에서 농림수산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농가부채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 농업투자 확대 등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종회 의원(무소속,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현재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가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만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과 관련 "제주 농업의 숙원사업으로 꼽히지만 제주도는 이 사업을 추진할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않아 도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 실패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소극행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변화하는 어업환경… 중장기 수산업 대책 마련 시급=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수산업 정책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주 연안에 아열대성 어종의 출현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제주도 어가 인구가 절반 가량 감소하는 등 어장·어가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제주도 어가수와 어가 인구는 각각 4013가구·9081명으로 10년전인 2009년 대비 각각 43.1%, 51.7% 줄었다.

박 의원은 "제주도는 본래 우리나라 청정 수산의 대표지역"이라며 "중장기 대책 수립 등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급변하는 어장·어가환경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주특유의 목축경관을 조성해 온 '마을공동목장'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을공동목장은 2009년 65곳에서 2018년 52곳으로 감소했다. 박 의원은 "일제강점기인 1943년 마을공동조합 수 123개와 비교하면 조합수는 58.54% 감소했으며, 최근 10년간 매각된 마을공동목장 부지는 1066ha로 약 323만평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기준 마을공동목장 52곳의 전체면적 5832.4ha 중 국공유지는 1467.3ha로 2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15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원희룡 지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한목소리'

의원들 "국가협력 반드시 필요"

국회가 제주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회 차원의 관심을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대통령공약이었던 해상운송비 사업에 대한 재정당국의 외면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도서지역 농산물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해상운송비 49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5년 연속이나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도 제주도는 제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2020-2025)에 총예산 738억원(국비 295억원)을 추진하면서 내년 예산에 123억원(국비 49억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삭감됐다.

정 의원은 재정당국의 '조건불리 직불금 중복 지원'이라는 논리에도 정면 반박했다. 정 의원은 "조건불리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도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해상운송비는 도서지역 농가의 농산물 육지출하에 따른 운송비 부담 경감이 목적"이라며 "목적성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는 "제주는 겨울 생산물이 많아서 내륙 소비에 끼치는 역할이 많다"며 "도민들이 해상물류비 때문에 부담을 떠안고 있다. 국가가 협력해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지역 특성상 육지로 출하되고 있어서 해상물류비 부담이 크다"며 제도 추진에 공감했고,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은 "대통령 공약인데 부처에서 정산이 안되고 있다. 힘을 더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소진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우려지역 허점 없도록 축산물 엄격 관리를"

김현권 의원, 대책 마련 요구
지하수 오염 문제 해법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의원)가 제주지역 축산분뇨 관리·감독 강화와 지하수 고갈·오염 문제 해법 등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15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은 이날 가축분뇨 발생 저감을 위한 처리시설 확대와 관리·감독을 위한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18일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이동중지 명령기간 중에 서귀포시 소재 양돈업장에서 분뇨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농가에서는 이전부터 수거를 요청했으나 행정이 이를 무시했다고 한다. 이어 유출사고가 되자마자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경직된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서부지역 농업용 지하수 관정 12곳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 질산성 질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무허가 양돈장이 집중분포된 제주 서부지역 일대 지하수 오염은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식품부 축사 적법화 사업 점검 결과, 제주의 완료 농가는 49.4%에 그친다"며 "제주도는 지하수 의존도가 큰 만큼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인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해 지하수 오염과 악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는 "관광객 왕래가 많은 제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며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축산물을 엄격히 관리하고 항구 반입에 허점이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유기질 비료 활용이 늘면 상대적으로 화학비료가 줄어야 하지만 되레 늘어나고 있다"며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 토양은 물이 잘 빠진다는 특징이 있다"며 "유기질 비료를 쓰려고 해도 공급량의 한계가 있다.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적정 시비 마련과 농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목숨 건 조업… '바람막이 규제 완화' 공감

원지사 "정부 건의 해결 노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의원)는 15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국정감사를 열고 연승어선 조업편의시설(FRP 바람막이)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을 내놨다.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제주어민들이 목숨을 건 원거리 조업이 이어짐에 따라 어민 안전을 위한 바람막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7년 5월부터 연승어선 검사지침에 따라 근해연승 및 연안복합어선(낚시어업)을 대상으로 FRP 바람막이 설치 톤수 규정을 적용해 제한하고 있다. 어선내 임의 공간 증설을 불허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선상에서 낚시 작업 중 바람과 파도로 인한 해상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제주도민의 어업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어민들은 어선에서 투·양승 작업 시 낚시줄의 날림과 낚시도구의 유실 방지, 원활한 미끼작업 등은 물론, 부상 위험 방지 등의 이유로 견고한 바람막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굉장히 유용했던 시설인데 지침 개정으로 어민들이 불편해 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해수부에 문제를 건의해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도 "해수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정된 사안"이라며 "정부 대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보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에 잘 건의해서 바람막이 시설 등 지침개정과 수산업법 시행개정 등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진기자

제주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19-01호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공개모집 공고

「지방공기업법」과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16일

제주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사장(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임용예정직위 주요 직무내용
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 총괄
나.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23조에 의한 사업수행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3급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상근임원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경영·경제·에너지 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5. 직무수행요건
가.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나.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하여야 함
6. 임용계약 및 보수
가. 성과계약으로 3년 계약(성과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가능)
나. 연봉액은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경영성과계약」에 따라 결정
※ 근무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제주에너지공사 등
7.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가. 접수기간 : 2019. 10. 16.(수) ~ 11. 1.(금) 18시 까지
※ 주중 근무시간(09:00~18:00) 접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제주부동산협동조합 회의실
– 주소 : (63219) 제주 제주시 청사로1길 16, 코아빌딩 3층
※ 방문 시 제주에너지공사 인사교육부 확인전화 필수: 064)720-7442
8. 제출서류
가. 지원서(사진부착) 1부
나. 직무수행계획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마.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
사. 관련 자격증 각1부(소지자에 한함)
아. 주민등록초본 1부
자. 기타 학위증, 연구논문 등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지원직위에 대한 비전제시, 경영구상 및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추진일정 등을 A4용지 7매 내외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원진술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jejuenergy.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9.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선발시험 방법
○ 1차 시험(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서류합격자 결정 : 응모자격에 대한 '적부' 판단
※ 1차 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개별 통지
○ 2차 시험(면접심사)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윤리관 등을 종합심사를 거쳐 적격자 선발
– 면접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
※ 모집일정에 따라 면접심사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임원후보 추천자 :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임원후보의추천절차)와 관련하여 지원자 접수 결과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기존 지원자는 지원서 제출 없이 추후에 같이 심사하게 됩니다.
다. 임원후보자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추천된 자 중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공사 경영을 위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후보자추천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용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 경영기획처 인사교육부(064-720-74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공고문은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www.jejuenergy.or.kr),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라인이여! 한마음으로!』

제26회 오라초등학교 총동문회 한마음축제

정겹고 풍성한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어릴적 학창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며 신명나는 『제26회 오라초등학교 총동문회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오니 가족과 함께 참석하시어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2019년 10월 20 일요일 10:00
※ 총동문회 사무실 개소식 09:20
○ 장 소 : 오라초등학교 운동장 (우천시 체육관)
○ 종 목 : 가수공연, 노래자랑, 이벤트게임
○ 주 최 : 오라초등학교 총동문회
○ 주 관 : 오라초등학교 제26회 동창회
○ 연락처 :
총 동 문 회 장 오 상 훈 (010-3696-5284)
집 행 위 원 장 송 맹 석 (010-2886-3850)

오라초등학교 총동문회
회 장 오 상 훈

제 19회

대정고등학교총동창회 체 육 대 회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제19회 대정고등학교총동창회 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부디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행사명 : 제19회 대정고등학교총동창회체육대회
■ 일 시 : 2019년 10월 20일(일) 개회식 10시
■ 장 소 : 대정고등학교운동장(우천시 송악관)
■ 주 관 : 대정고등학교 총동창회
■ 연락처 : 회 장 양창선 010-7305-4419
상임부회장 이경철 010-2693-2412
사 무 국 장 이지훈 010-9066-1792

대정고등학교총동창회
회 장 양 창 선